

중국 개혁의 성과와 과제: 중국적 특색의 새로운 길은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현정 외 지음,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한울, 2019)을 읽고

장정아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

한국에서 중국 연구와 교육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중국연구를 하려는 학생들의 교재나 일반인의 입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책, 그중에서도 여러 분야의 학자가 함께 쓴 책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 소개할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은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가 함께 현대 중국의 변화에 대해 서술한 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와 담론에서 시작하여 체제·제도·전략, 그리고 생활구조와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지식·문화 담론에서부터 제도와 사회문제, 산업과 경제발전, 정치개혁과 소유제의 변화 등 서로 매우 다른 분야를 각각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역사적 도전과 곤경 속에서 새로운 혁명의 완수와 강력한 근대 국가 건설을 동시에 수행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나갔던 중국의 고민과 모색이 관통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중국적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책의 구성을 따라가며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적 특색의 길이 가진 가능성과 곤경에 대해 논한 후, 여러 저자가 민주화와 시민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데 주목하여 ‘중국적 민주’가 가능할지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고자 한다.

I. 중국의 개혁: 담론과 제도

책의 1부인 ‘역사와 담론 속의 현대 중국’은 현대 중국의 이념과 제도 그리고 지식·문화 담론을 다룬다. 1장에서 저자 유용태는 공화제와 일당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중화민족과 소수민족이라는 세 쌍의 키워드를 통해 현대 중국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독특한 특색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한다. 청 제국은 근대국가로 전환한 후에도 다른 제국들처럼 분열되지 않고 영토적 연속성과 위계화된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유지했고, 역사적 중국과 마찬가지로 현실 중국은 하나의 국가이되 일반적 국가가 아닌 제국의 면모를 내장한 국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하에서 인민이 과연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중국의 답은 계급모순이 해소되었으므로 다당제가 필요없다는 것이지만, 저자는 흔히 생각하듯 중국을 단순한 공산당 일당체제라고만 보는 것은 단순한 시각임을 지적한다. 중국이 만들어 낸 인민정치협상회의 등의 제도는 서구식의 회제와도 소련식 소비에트제와도 다른 독특한 것으로, 직업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강력한 혁명정당과 군소정당을 포함하여 중국의 조건에 맞게 변형되어 만들어져 온 것이다. 다당합작은 비록 현실에서는 다당경쟁이 빠져 있으므로 제한적이지만, 소비에트식 일당제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의 특색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제와 일당제뿐 아니라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혼합경제 역시 중국적 특색의 제도적 결합이며, 다원일체로서의 중화민족 또한 수많은 지식인의 담론과 토론과 현실적 싸움을 통해 만들어져 온 독특한 개념이다. 헌법상 인민주권이 실현되어 모든 소수민족에게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으므로 제국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중국 학자 왕후이에 대해 저자는 소수민족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비판하면서, 인민주권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소수민족들도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정체(政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 모델론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동아시아적 보편성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1장의 주장이다.

2장에서 저자 이정훈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지식·문화 담론을 고찰하는

데, 1990년대를 분석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당시가 개혁개방이 본격 추진된 시기로 오늘날 성취의 초석이 되었고, 세계화를 향한 강렬한 열망과 좌절감의 공존이 이후 중국의 서구 지향과 민족주의라는 분열적 태도를 낳은 시기로서 현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지식인들이 제기한 비판적 담론과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 제시를 자유주의,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신좌파, (신)민족주의, 마오쩌둥 좌파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보여 주고자 한다. 특히 관건이 되는 질문은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가 중국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개혁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국가 주도의 질서회복을 강조하는 신권위주의가 등장했다. 이후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를 통해 국가 주도의 시장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반감은 어느 정도 약화되었고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은 정부와의 긴장관계가 조금씩 해소되며 온건화되었다. 그런데 신권위주의의 주류 이데올로기화와 동시에 지식 공론장에서 신좌파 담론이 새롭게 비판 담론으로 등장한다. 신좌파 담론은 기존의 자유주의와 신권위주의가 모두 중국의 당면 문제에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전통에서 긍정적 요소를 재발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중의 층위에서는 민족주의가 새로운 유행으로 확산되었고, 마오 좌파 세력은 마오 후기사상과 문혁 경험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집단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중국 외부에서는 민족주의를 중국 정부가 조장한 것이라고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필자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사실 대중적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 특히 정부의 통제를 무력화할 폭발력을 지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책의 2부인 ‘체제·제도·전략으로서의 중국’에서는 외교, 정치, 소유제, 경제, 기술산업 영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개혁개방기 대외관계의 연속성과 변화를 다룬 3장에서 저자 정재호는 중국의 대외관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흔히 생각하는 1978년이 아닌 1981년을 개혁개방기 이전과 이후의 분수령으로 삼는다. 저자는 1976년 마오의 사망 이후에도 국내의 체제 개혁이 모두 1978년 말 시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정부의 공식 담론과 실제 현

실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대외관계는 1981년까지는 마오 시기의 특징들이 상당 부분 지속되었다는 점을 짚고 있다. 공식적·제도적 사건과 담론만이 아니라 실제 중국의 복잡한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면 시기구분의 기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머지 두 시기는 도광양회 전략을 견지한 1982~2008년, 그리고 더 주동적이고 공세적 외교를 시작한 2009년 이후이다.

중요한 점은, 시기별 차이와 상관없이 1949~2017년 중국의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주권 수호와 안보 확보라는 점이다. 저자가 강조하듯 이는 아편전쟁 이후 겪었던 국치의 강렬한 기억의 영향으로서, 이 역사적 맥락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관건이다. 주권과 안보·영토 수호를 통한 국가 존엄의 회복을 절대절명의 명제로 내세우며 강경한 대내외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통치방식을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중국인이, 그리고 기꺼이는 아니지만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배경도 이와 관련된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관계를 지탱하는 인식의 중추에는 2009년 이후 중국이 주창하는 소위 ‘핵심이익’, 즉 주권, 안보, 경제이익이 있다.

저자는 2009년 이후 중국의 태도가 훨씬 공세적으로 변하여, 직접 국제지구와 협력체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동아시아의 어느 현안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배제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점점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고 있다.

4장의 저자 조영남에 따르면 중국의 정치개혁 설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혁개방에 성공했으면서도 정치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는 독특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는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를 민주화와 제도화의 개념으로 나누어 논한다. 중국 정치개혁의 핵심 원칙은 공산당 일당제 강화와 경제발전에서의 기여였기에 정치개혁은 ‘제도화’에 집중되었을 뿐,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나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개혁(‘민주화’)은 중심 과제가 아니었다.

정치의 제도화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 기구 개혁과 인사제도 개혁, 의법행정을 향한 제도정비 노력, 국가 규제기구의 강화와 중앙-지방관계의 재조정 등이 진행되어 왔다. 또 저자는 정치 민주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하면서, 촌민위원회 선거로 농민의 정치참여는 증가했지

만 선거가 상당 부분 형식적이고 촌민위원회가 국가기구가 아니며 여전히 상급 정부와 공산당 통제를 못 벗어난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치 민주화를 논할 때 중국 내부와 외부의 시각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서구 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조건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적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징은 공산당 영도, 광범위한 인민의 주인됨, 그리고 인민민주독재와 민주집중제다. 따라서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제도, 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 자치제도, 도시와 농촌의 기층민주제도 등을 통해 나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은 두 가지 정치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권력집중과 부정부패 해결, 그리고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사회 불안정 해소로서, 이를 위해서는 당 정분리와 정치 민주화가 필요하다.

개혁개방시기 중국 소유제도의 변화를 다룬 5장에서 저자 강광문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강조하고, 소유제 개혁이 결국 일부의 이익에 기여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사회주의 중국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제를 철폐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에서 벗어날 물질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 앞에서 좌절했다. 중국 소유제의 핵심 문제는 소유와 이용 주체의 불명확성 및 그에 따른 평등주의와 생산의 비효율성이다. 토지제도 또한 토지 소유·이용에서 도시와 농촌이 이원화되어 농민의 권익은 덜 보장받고 있고, 도시에서는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 도시 토지의 소유 주체인지, 추상적인 국가가 어떻게 소유권을 행사하는지 불분명하다.

결국 현실에서는 지방정부와 부동산개발회사, 은행 등 부동산 관련 업체들만 큰 이익을 보았다고 저자는 지적하면서, 중국에선 국가가 모든 도시 토지를 소유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주인이 불명확하고 토지는 거액의 이익을 얻는 상품으로 변질되었다고 본다. 농촌에서도 농민 개개인이 아닌 촌민위원회나 촌의 관리들이 농촌 토지 관련 권리들을 행사함으로써 농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어 농민들의 권익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유기업 또한 소유권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유자산이 유실되는데, 이는 정부 관료와 경영진의 부패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기업은 전체 인민의 소유인

데 전체 인민은 그 기업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저자는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라고 하면서,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업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계속 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5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40년간 소유제도의 변화 과정이 이득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사이의 투쟁과 부침의 역사였다고 규정된다.

6장에서 저자 이근은 추격이론에 근거하여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추격을 살펴본다. 저자가 계속 주장해 온 경제추격의 세 가지 역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다른 모델을 추구해야만 미국을 넘을 수 있고, 우회전략을 택해야 하며, 서방 자본주의의 침체와 같은 위기 및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이라는 기회의 창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 된다. 중국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다른 길을 택하여 성과를 낸 동아시아 모델과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대학 연구소 지식의 빠른 상업화, 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브랜드·기술 확보로 추격시간 단축, 그리고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토착기업을 육성하는 학습전략 등에 특수성이 있다.

중국은 분배 분야에서 문제가 악화되다가 최근 호전되기 시작했고 지니 계수는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 2008년 이후 연해 쪽의 성장이 내륙보다 떨어지는 성장 역전현상이 발생했으며, 외국자본 의존도는 하락하고 내수 위주 성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저자는 최근이 미국 경쟁력의 핵심인 4대 분야에서 중국이 추격을 시도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 상황이라고 하면서, 중국 모델로 성공하려면 미국모델과 다른 중국 특색의 개방경제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하는데 현재 시진핑 체제의 권위주의성으로 인해 그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중국만의 민주주의 모델을 과연 창출할 수 있을지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이동통신 산업을 다룬 7장에서 저자 이재홍은 한중 수교 후 산업협력과 교역에서 가장 성과를 거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동통신 분야라고 하면서, 외교관계 수립만으로 이동통신 분야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간의 절실한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자들 간의 상호교류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공격적 정책과 기술개발·인력양성으로 중국의

기술산업이 발전하였지만 여러 가지 난점 속에서 유독 이동통신산업이 일찍 성장한 것은 한중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며 이뤄진 협력교류가 중요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정책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허용하여 한국 기업이 대성공을 거뒀고, 중국 당국은 한국 기업의 존재를 지렛대대로 선진국 통신 기업들과의 기술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었다. 중국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획득하며 성공 모델을 만들었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선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윈윈 협력이 양국 대학 간 교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한중 간 윈윈 전략 모색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

II. 생활구조와 사회적 실천 속 개혁: 어떤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책의 3부는 ‘생활구조와 사회적 실천 속의 중국’으로, 개발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시민권의 차등성 문제, 혼인과 가족의 변화, 농민공 제도의 변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함의를 다룬다. 8장에서 저자 장경섭은 중국의 개혁기 정치경제체제를 ‘개발다원주의(developmental pluralism)’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다원주의는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뿐 아니라 개혁 이전 사회주의체제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의존과 변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8장은 중국 개혁체제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개혁기 중국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유제들은 자본주의 요소들과 단순히 병존만 한 것이 아니라 새 요소들의 도입과 확립 과정에 긴밀히 결합되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유제들의 유지·변용으로 사회보장적 최소 기초를 유지하려는 정책의지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배제와 차별이 생겨났고 인민으로서는 시장경제적 불평등에다가 사회주의적 차별이 중첩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의 개발다원주의는 러시아의 자본주의 전환에 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이 훨씬 컸고 사회적 통치성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컸지만, 중국의 개발시민권은 경제발전 공헌성의 차등적 중요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보편적 사회권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저자가 명명한 차등적 개발시민권 체제 속에서, 그 시민들이 ‘정치시민’이 되려 할 때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강력한 통제 그리고 대다수 인민에 대한 개발시민권적 포섭과 동원은 인민의 저항성을 약화시키지만 동시에 잠재적 폭발성도 있다. 인민은 개발시민으로서의 지위에 심각한 차별성을 경험할 때는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개발시민들의 저항이 정치시민으로의 진화로 이어질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9장에서 저자 이현정은 40년간의 혼인과 가족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는데, 중국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 변화에서 특징적인 아이러니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국가의 도래와 함께 여성의 평등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이 아이러니는 이후에도 일관된 흐름으로 존재하여, 상대적이고 표면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낳는 다양한 변화는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을 동원하고 가족에 개입하는 방식이었다.

신중국 초기 물질적·제도적인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부장적 권력은 쇠퇴되었고 여성의 지위는 높아졌지만, 그것은 공산당이 인민에 대한 유일무이한 절대권력자로 자리 잡는 과정이기도 했다. ‘여성의 남성화’ 혹은 ‘국가의 여성 동원’은 여성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고, 과거 남성 친족이 했던 지배와 통제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게 된다. 개혁기 집체의 해체와 함께 가족과 친족 집단이 다시 중요해졌지만, 중요한 점은 중국 국가가 결코 가족과 종족의 대표에게 통제와 지배의 권한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민공 물질 또한 개혁기 중국에서 가족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다.

개혁기 중국의 혼인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특이한 점은 개혁기 이전에 비해 혼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약해지고 부모강제혼인도 거의 사라졌지만 최근엔 젊은 이들이 부모 세대에게 물질적 의존도가 높아지며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혼인 관련 결정을 위임하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혼인 절차도 과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어서 변화와 단절만 있는 것은 아니며, 신부대의 변화는 이제

농촌의 부모들이 딸과도 호혜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현실을 반영한다. 중국 가족의 변화는 근대적 국가의 형성 및 바람직한 인민의 양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0장에서 저자 정중호는 호구제도의 개혁 속 농민공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신중국 초기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려는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의 단위제도 그리고 도시 노동자 규모 제한을 위한 호적제도와 도농 격차 유지는 농민공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농촌의 탈집체화와 도시의 개혁에 따라 농민공 문제는 본격 대두했고, 특히 2001년부터는 신세대 농민공, 즉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등장하며 기존 농민공과 사고방식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호구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호구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농민의 저항도 동시에 계속 표출되고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저자가 지적하듯 호구제도 폐지 논의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의 통치 패러다임과 통치능력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이며 변화의 시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농민공의 시민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한 차별은 문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신세대 농민공의 정치 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치적-사회적 목소리를 허용하는 기제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저자는 만일 농민공의 시민화와 도시정착이 성공한다면 인류 사회발전에 대한 새로운 '중국 방안'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11장에서 저자 조홍식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을 다루면서 중국적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보여 준다. 개혁개방 이전 시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각급 생산조직체들이 인민들에 대해 필요한 보장을 제공했고, 완전한 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보장의 근간이던 단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 나갔고, 특히 구조적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자신감이 더해져 2010년 종합적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1장은 특히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서구의 복지 이론과 보편적 인권 시각이 유입되며 확산되는 데 대한 반발과 경계로 중국 특색

사회보장 관점이 더 강화되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공식 사회 보장제도에 전통적 민간복지, 즉 가정 보장과 이웃간 상부상조, 노동구제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저자는 점점 이러한 다원화된 보장 공급주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노동관계는 더욱 시장관계에 편입되어 노동의 상품화가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빈곤 퇴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숙제가 많다. 저자는 사회주의 유산을 가진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의 속도조절을 하며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을 볼 때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고 하면서, 문제는 민주화 가능 여부에 있다고 진단한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제도와 실천 속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 함의를 다룬 3부는,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개인들이 어떤 주체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개인들은 노동자로서, 농민으로서, 세대별로 다른 의식구조 속에서, 때로는 애국주의로 단결하며, 때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때로는 부모에게 저항하지만 때로는 기꺼이 부모에게 자기 삶의 결정권을 맡기며, 때로는 농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때로는 농민 신분을 거부하며, 국가가 만들어 내는 국민 정체성 속에서 또는 그것에 맞서며 어떤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3부의 내용은 결국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민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인민의 삶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주의 깊고 면밀해야 한다. 9장에서 이현정이 이야기하듯 사회주의 혁명은 결혼에 대한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녀 세대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본인의 주체적 결정을 중시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젊은이들이 배우자 선택부터 결혼 이후의 생활을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의존하면서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현상은, 중국에서 개인의 평등과 자유로운 주체에 대한 논의가 결코 단순할 수 없을 것을 보여 준다.

중국 농촌에서 거시적 변화 속에서 일어난 사생활과 사랑·성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엔윈샹은, 처음에 현지조사를 통해 젊은이들의 엄청난 의식의 변화를 보면서 드디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 중국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하고 흥분

했으나, “초고와 조사자료를 계속해서 본 끝에, 조상의 음덕에서 뛰쳐나온 중국의 개인들이 아직 진정한 독립적-자립적-자주적 개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閻云翔, 2006: 5)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중국 농촌에서 새로 등장한 청년 주체성에 대해 “공덕(公德)이 없는 개인”이라고 표현하였다. 개혁시기 인민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줄어든 자리에 생긴 거대한 사회적-도덕적 진공상태는 소비주의와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실용적 가치관들로 메꿔졌다고 하면서 옌윈샹은 “중국에서 개인은 과연 진정한 독립적 자주성을 지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마지막까지 던지고 있다. 이처럼 변화의 함의를 분석하고 개인들이 어떤 주체가 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작업은 주의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한다.

III. 중국적 특색의 길: 가능성과 곤경

이 책에서 비록 모든 저자가 의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글에서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 모색해 온 중국적 특색의 길이다. 인민정치협상회의이나 민족구역 자치제와 같은 제도, 사회주의 전통 속에서 긍정적 요소를 재발견하며 미래를 제시하려는 신좌파 등의 지식담론, 100년의 국치라는 강렬한 기억에서 나오는 주권·영토 수호와 안보의 확보에 대한 강박, 사회주의적 공유제와 함께 공존하는 사용권 분리 등의 복잡한 소유제도, 경제적 추격시간을 단축해 온 다양한 전략, 그리고 마오 시기 급속한 발전과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해 택한 호구제의 끊임없는 개혁 등은 모두 이러한 중국적 특색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과 사회주의 역사 그리고 개혁기의 현실에 대응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현대 중국의 변화와 미래 기획의 분석에 있어서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원준이 지적 하듯 중국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토지 소유권의 내용을 근대적 소유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하면 일정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원준, 2019:35). 그리고 이러한 중국적 특색의 다양한 제도와 전략들은 저자들이 곳곳에서 인정하

듯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 기본적 권리의 일정한 신장,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적 특색은 여전히 중국 바깥에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중국이 만들어 내는 변화가 어떤 면에서 중국적 특색의 새로운 길인지에 주목하고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그것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에 동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등장한 사구(社區)는 새로운 사회관리체제의 성격을 띠며, 박철현(2017)의 연구에서 제시되듯 스마트시티의 일환으로 등장한 스마트 사구는 ‘중국적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구축하는 테크놀로지로 작동하고 있다. 사구가 이러한 역할과 함께 민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장운미(2009)는 중국 노동시장에서 지연망(地緣網)이라는 전통적 관행이 다시 활용되는 양상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관계는 자본-노동이라는 계급적 대립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분리시키지만 동시에 노동자를 단결하게 만들고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형성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본다.

이러한 중국적 특색의 길은 중국 내의 특수한 사례나 일시적 실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이러한 ‘중국적 표준’과 ‘중국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며 보편성을 획득하려 하는 ‘디지털 실크로드’까지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과 인프라의 수출을 넘어 정치적·체제적 연대와 통합전략까지도 내포하며 표준의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차정미, 2020).

그렇기에 중국이 걷는 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동아시아 질서가 비록 중국이라는 중심을 일반적으로 향해 있다기보다 서로 연동되어 상호 작용하고 있지만(전인갑·장정아, 2014),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소위 신중화질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과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속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과연 중국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만의 전략을 짤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묻는 정재호의 질문(102쪽)은 “중국 문명담론이 정치·군사적 패권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사회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전인갑의 제언(이보림, 2019)과 공명하며 무겁게 우리에게 던져진다.

마지막으로 중국적 민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 책에서 여러 저자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제시하는 중국의 과제는 민주화와 시민 정치참여의 필요성으로 수렴되고 있다. 어쩌면 중국정부로서는 이런 결론이 그다지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 조영남이 지적하듯 중국은 ‘보편적’ 민주라는 것은 서양식 민주가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각 사회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다른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식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중국에게 아픈 질문일 것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적 민주는 ‘가장 광범위한 인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비록 중국은 현재 이미 인민정치협상제도 등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현실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는 벗어났지만 아직 민주주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중국 특색의 권위주의’ 일 뿐”(127쪽)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으며, “중공의 실천에는 근대의 치욕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선혈,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의 땀방울과 더불어 천안문의 기억, 티베트·신장(新疆)·홍콩의 상처가 있기 때문”(안치영, 2020)이다.

이남주 역시 시진핑 사상에 대해 평가하면서 “인민이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조직 형식을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중공이 이념의 실현 주체로 자임하고 있어서, 중공이 과연 인민의 이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이남주, 2018: 325)고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임이 계속되면 결국 사회주의적 가치나 인민성의 실현보다 국가주의적 기획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구식 ‘민주’의 ‘보편적 외피’를 부정하면서 독자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중국식 길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중국식 민주는 인민이 어떻게 주체가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남은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김광익의 말처럼 “비균질적 시간들의 작동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역동성에 주목”(16쪽)하면서, “인민들의 치열한 고투의 현장을 기록·분석하고 동참하며 ‘보편’ 중국의 쟁론을 엘리트 집단의 통치 도구나 지적 유희로부터 구출해 내는 작업”(조문영 2019: 118)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박철현. 2017. “중국 개혁기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스마트시티 건설: 상하이 푸둥신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집 1호, 39-85.
- 안치영. 2020. “중국 일으킨 마오, 배불린 덩샤오핑, 강대국 만든 시진핑.” 『중앙일보』 2020. 7. 1.
- 이남주. 2018. “개혁개방 ‘신시대’와 시진핑(習近平)사상.” 『동향과 전망』 103호, 303-335.
- 이보림. 2019. “전인갑 교수, ‘한국은 중국 세계질서 담론 주목해야.’” 『인천투데이』 2019. 12. 11.
- 이원준. 2019. 『근대 중국의 토지 소유권과 사회 관행』, 학고방.
- 장윤미. 2009. “개혁시기 중국 신노동계급의 형성과 지연망(地緣網) 노동관행의 부활.” 『현대중국연구』 11권 1호, 103-144.
- 전인갑·장정아. 2014.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재구성 재론: 중심의 상대화를 위한 모색.” 『중국학보』 69집, 129-163.
- 조문영. 2019. “‘보편’ 중국의 부상과 인류학의 국가중심성 비판.” 『중국사회과학논총』 1권 1호, 93-128.
- 차정미. 2020.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중화 디지털 블록’과 ‘디지털 위계’의 부상.” 『현대중국연구』 21권 4호, 65-113.
- 閻云翔. 2006. 『私人生活的變革: 一個中國村庄里的愛情,家庭與親密關係, 1949~1999』, 中國: 上海書店出版社.